

구자동 운영위원 지적

쪽방생활자 지원금 명목으로 배정된 대구시 예산의 80%가 인건비로 나타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복지예산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자동 대구시의회 운영전문위원은 12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156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통해 "쪽방생활자를 위한 내년도 보조금 1억6천100만원 가운데 직원 인건비가 1억3천만원, 약품비 2천600만원, 관리운영비 500만원 등 대부분이 관리비용"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에는 대구역 뒤쪽과 경

“쪽방생활자 지원금 80%가 인건비”

대구시 복지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상감영공원 및 동대구역 부근 등에 636명의 쪽방생활자가 있으며, 시는 잠재적 노숙자인 쪽방생활자의 노숙을 예방하기 위해 자원봉사 능력개발원에 이 돈을 지급하고 있다.

전성배 시의원(달성1)도 예결심사에서 "쪽방생활자에 대한 의료지원, 재활의지 고취사업이 부족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예산 1억 5천만원도 쪽방생활자 지원금과 마

찬가지다.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의 모임이나 행사에 월세가 지원되는 것이다.

구 위원은 "시나 개인차원의 사회복지사업에서 이같은 예산이 부지기수로 나타난다"며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사회복지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